공천 혁신도 새 인물도 없다…민주당 지방선거 위기

혁신위 제안 '세대균형공천' '청년 가점 40%' 수용 쉽지 않을 듯

혁신 리더십 실종·기득권 나눠먹기 흐름…호남민심은 부글부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혁신 드라이브'가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선 패배를 상쇄할 만한 혁신 공천 방안도, 민심의 주목을 받을 만한 새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마저 패배하는 것은 물론 호남만 '정치적 섬'으로 남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세대균형공천'과 '청년 가점 40%'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부터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세대균형공천은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할 때 특정 세대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의 50대 공천 확정자는 63.2%로 과반이다.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앞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지방의회 의원도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선출된 후보자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당 지도부 선출 시 표의 등가성 제고', '선출직 공직자 정견 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 '청와대 및 부처 장·차관 출신은 정치신인에서 제외' 등의 방안도 함께 냈다.

하지만, 혁신위의 제안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민주당 내외의 반응이다. 경선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의 주장은 대부분 당규를 고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중앙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방선거 기획단도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7일 문을 닫는다. 나름 성과로 광역·기초의원 여성·청년 30% 의무공천 및 선순위 우선 추천(기초의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켜지기 어려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결국, 민주당은 혁신 공천 바람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고, 내주부터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중앙당은 혁신 리더십 실종에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지역은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 나눠 먹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적 관심을 모을만한 새인물 영입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대통령실 이전 등의 정치적 이슈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광역단체장의 경우, 호남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 의원, 오성일 혁신위원, 홍창민 혁신위원, 장경태 의원, 민형배 의원, 유정주 의원.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할 경우, 차기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장제원 "청와대 조직 조금 줄어들 것…정책실과 민관합동위는 별개"

"예비비 추가 확보 잘 협조 장관 후보 내정된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6일 "청와대 조직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수석비서관 이름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 조직 개편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앨지 여부와 관련해 "어제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정책실장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책 파트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합동위원회가 정책실 기능을 대체할지 묻는 말에 "지금 직제상으로는 정책실장 산하에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있다"면서 "정책 파트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민관합동위는 그거랑 별개일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60억원에 더해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비비 추가 확보가) 잘 협조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거 외에 추가로 하겠다고 이야기됐다"며 "추가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협조해주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 시작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떨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고를 하면 제가 브리핑을 하겠다"며 "이사 일정을 빨리 진행하면 40일 만에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비가 나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고, 잘 될 거다.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금 내정됐다고 오늘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내정된 것 없다"며 "검증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한다.

송 전 대표 측은 6일 "민주당 중앙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정식으로 등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등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도 나선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1일 주소를 서울시로 옮기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대나 전략공천은 제 머릿속에 없다"며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오는 7일까지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에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 검증 절차를 거치고,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4명만이 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 전 대표 출마에 회의적인 입장도 적지 않은 가운데, '대항마'로 누가 추가 등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고심중인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종석 전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사로 꼽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새물결 오늘 합당 서약식 '합당 선언'

12일 검찰개혁 논의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이 7일 합당 합의문 서약식을 하고 합당을 선언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오섭 대변인이 회의 도중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며 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화한 바 있다.

비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역사와정의·문화강국·교육자치미래 등 3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도종환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12일 열기로 했다"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를 다룰 비공개 의원 간담회는 7일, 언론개혁 관련 비공개 의원 간담회도 11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지금 양당 정책위의장이 회동하고 있다"며 "공통 공약을 나열한 뒤 협상이 가능한 것 위주로 우선순위를 매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 의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이 116억원이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 118억원을 배정했다.

/연합뉴스